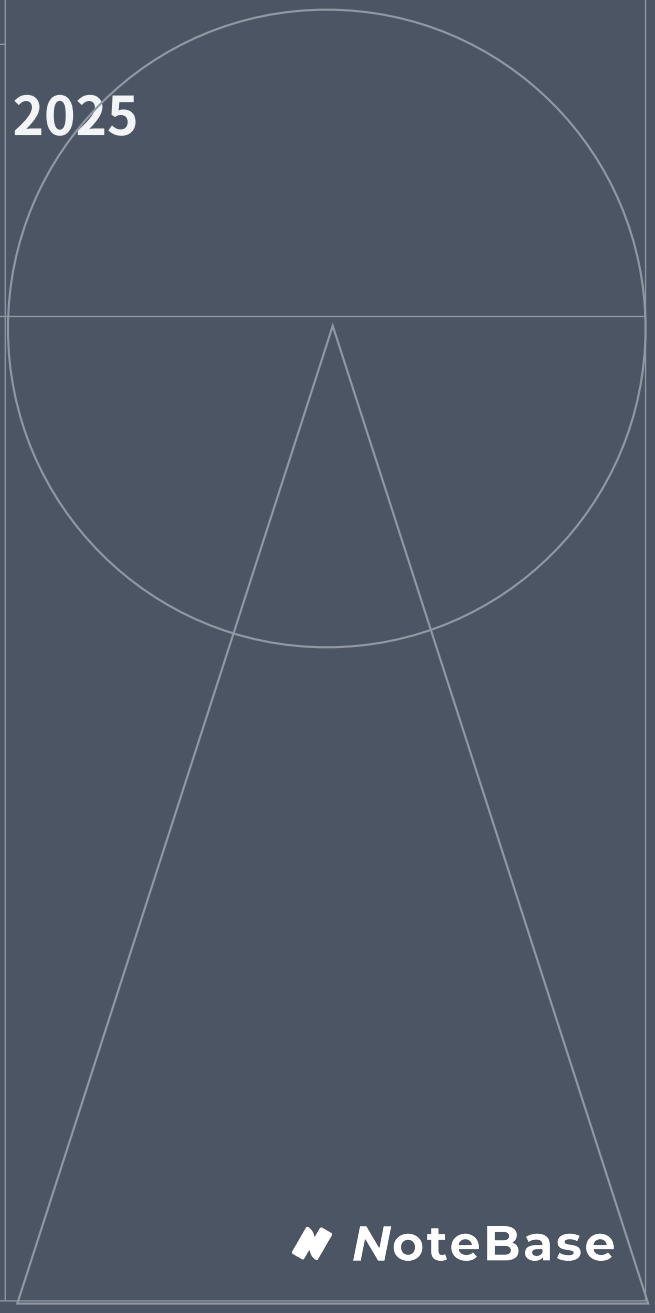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회직/9급 · 사회 · 2025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회직/9급 · 사회 · 2025

공무원/국회직/9급 · 사회 · 2025

1. 다음은 어느 근대 정치 사상가의 주장이다. 이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생명·자유·재산에 대한 자연권을 가진다. 자연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은 사회계약을 통해 정부를 구성하고, 이 정부는 국민의 동의에 바탕을 두며 자연권을 보호할 책임을 가진다.

① 사적 소유의 발생이 인간 사이의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본다.

② 인간을 자연 상태에서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존재로 본다.

③ 질서와 안전은 절대적 권위를 지닌 통치자의 강력한 권력에 의해 유지된다고 본다.

④ 국가의 권력을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리하여 권력의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본다.

⑤ 일반 의지를 따르는 통치는 국민 모두가 자기 의지에 따라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이라고 본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제시문의 자연 상태, 자연권, 사회계약, 국민의 동의를 근거로 사상가를 로크로 파악하고 로크의 권력 분립 사상과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로크: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생명·자유·재산의 자연권을 가진다. 자연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회계약으로 정부를 구성하고, 정부의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나온다. 또한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리를 주장한다.
홉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보존과 이익을 추구하여 서로 투쟁하므로, 질서와 안전을 위해 강력한 주권자에게 권리를 양도해야 한다고 본다.
루소: 사유 재산의 발생을 불평등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일반 의지에 기초한 국민 주권과 직접 민주 정치를 강조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사적 소유의 발생이 인간 사이의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주장은 로크가 아니라 루소의 견해이다. 올바르게는 루소가 사유 재산의 성립을 사회적 불평등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았다고 해야 한다.
② X - '자연 상태에서 생존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존재'라는 설명은 인간의 자기 보존 욕구와 경쟁을 강조한 홉스에 가깝다. 올바르게는 로크가 자연 상태의 인간을 자유롭고 평등하며 자연법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보았다고 해야 한다.
③ X - '절대적 권위를 지닌 통치자의 강력한 권력'으로 질서와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홉스의 견해이다. 올바르게는 로크가 국민의 동의에 기초한 제한 정부와 권력 분립을 통해 자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다고 해야 한다.
④ O - 로크는 국가 권력을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리하여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제시문의 국민 동의와 자연권 보호라는 관점에도 부합한다.
⑤ X - 국민 주권과 일반 의지에 기초한 통치는 루소의 견해이다. 특히 '국민 모두가 자기 의지에 따라'라는 표현은 각자의 사적 의지를 뜻하는 것처럼 부정확하다. 올바르게는 루소가 국민이 일반 의지에 따라 주권을 행사하며 스스로 법을 제정하는 직접 민주 정치를 강조했다고 해야 한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①의 사유 재산, ②의 자연 상태, ③의 사회계약, ⑤의 국민 주권은 모두 근대 사회계약론과 관련된 표현이라 로크의 주장처럼 보이기 쉽다. 그러나 사유 재산과 불평등·일반 의지는 루소, 자기 보존과 절대 주권은 홉스, 자연권 보호와 입법권·집행권의 분리는 로크에 연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시문에서 '생명·자유·재산의 자연권', '국민의 동의', '정부의 자연권 보호 책임'이 함께 나오면 로크로 판단한다. 이어지는 선지에서는 로크의 제한 정부, 저항권,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리를 찾는다.

암기 포인트

홉스는 자기 보존과 절대 주권, 로크는 자연권과 권력 분립, 루소는 일반 의지와 국민 주권이다.

NoteBase

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재화의 특성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 한 사람이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가 줄어들지 않는다.

< 보 기 >

ㄱ.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

ㄴ. 부정적 외부 효과로 인해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ㄷ. 시장에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된다.

ㄹ.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과다한 사용으로 인해 고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닌 공공재의 특성 및 공공재가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운 이유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비배제성: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재화의 이용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성질이다.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비경합성: 한 사람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나 기회가 줄어들지 않는 성질이다.
공공재는 비배제성 때문에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편익만 누리려는 사람이 생기므로, 시장에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다.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큰 긍정적 외부 효과와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시장에서 과소 생산된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ㄷ이다.
② O — ㄱ의 무임승차자 문제와 ㄷ의 과소 생산은 모두 공공재의 비배제성에서 이어지는 대표적 특성이다.
③ X — ㄷ은 옳지만 ㄴ은 틀리다. '부정적 외부 효과'가 아니라 공공재의 긍정적 외부 효과와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 시장 공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어진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ㄷ이다.
④ X — ㄴ과 ㄹ이 모두 틀리다. 공공재는 긍정적 외부 효과와 무임승차 문제로 과소 생산되며, 과도한 사용으로 고갈될 수 있는 재화는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지닌 공유 자원이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ㄷ이다.
⑤ X —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공공재는 비경합적이므로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 가능량을 직접 줄이지 않는다. '과도한 사용으로 고갈될 수 있다'는 설명은 공공재가 아니라 공유 자원에 해당한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ㄷ이다.

오답 포인트

ㄴ에서는 공공재의 과소 생산을 '부정적 외부 효과'와 연결한 표현이 함정이다. 공공재는 편익이 제3자에게도 미치는 긍정적 외부 효과와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 ㄹ에서는 비배제성만 보고 공공재와 공유 자원을 혼동하기 쉽다. 공공재는 비경합적이지만 공유 자원은 경합적이어서 과잉 사용과 고갈 문제가 생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배제 가능 여부'와 '소비의 경합 여부'를 나누어 판단한다. 비배제적·비경합적이면 공공재이므로 무임승차와 과소 생산을 연결한다. 비배제적이지만 경합적이어서 과잉 사용과 고갈이 나타나면 공유 자원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공공재는 비배제·비경합, 무임승차·과소 생산이다. 공유 자원은 비배제·경합, 과잉 사용·고갈이다.

NoteBase

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소비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소비재의 가격을 반영한 물가지수
>
> (나)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상품의 가격을 반영한 물가지수

① (가)는 가계의 생계비를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② (가)에는 기업이 생산을 위해 구매한 상품의 가격이 반영되지 않는다.

③ (가)에는 가계가 구입한 외국산 수입 승용차의 가격이 반영되지 않는다.

④ (나)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어 100을 곱한 값이다.

⑤ (나)에는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하여 수출한 상품의 가격이 반영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소비자 물가 지수와 GDP 디플레이터의 조사 대상 범위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소비자 물가 지수(CPI): 가계가 소비하는 대표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물가 지수이다.
국내에서 가계가 구입한 소비재라면 수입품도 포함하지만, 기업이 생산을 위해 구입한 상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GDP 디플레이터: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물가 지수이다. 수출품은 국내 생산물이므로 포함하지만 수입품은 국내 생산물이 아니므로 포함하지 않는다.
핵심 대비: 소비자 물가 지수는 '가계의 소비'를 기준으로 하고,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 생산'을 기준으로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소비자 물가 지수는 가계가 주로 구입하는 소비재와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보여 주므로 가계의 생계비 변화를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② O — 기업이 생산을 위해 구입한 상품은 가계의 소비재가 아니므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③ X — 틀린 표현은 '가계가 구입한 외국산 수입 승용차의 가격이 반영되지 않는다'이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생산지를 따지는 지수가 아니라 가계의 소비 생활과 관련된 대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하므로, 가계가 구입하는 수입 승용차의 가격도 반영된다.
④ O —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뒤 100을 곱하여 구한다.
⑤ O — 국내에서 생산되어 수출된 상품은 국내 생산물에 해당하므로 그 가격이 GDP 디플레이터에 반영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수입품은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GDP 디플레이터의 기준을 소비자 물가 지수에 잘못 적용하게 만드는 선지이다. 수입품이라도 국내 가계가 소비하는 대표 품목이면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포함될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조사 기준을 확인한다. 가계의 소비 품목을 기준으로 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이므로 수입 소비재를 포함할 수 있고,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을 기준으로 하면 GDP 디플레이터이므로 수출품은 포함하고 수입품은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소비자 물가 지수는 가계 소비 기준,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 생산 기준이다. 수입 소비재는 전자에, 국내 생산 수출품은 후자에 포함된다.

NoteBase

4.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가)와 (나)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국제 사회 내 제도와 규범의 역할을 강조하며, 협력의 가능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중시한다.
>
> (나) 국제 사회에서 국가의 자율성과 생존을 가장 중시하며, 권력의 분배와 경쟁이 국제 질서를 형성한다고 본다.

① (가)는 국제 사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군사적 수단을 중요시한다.

② (가)는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이 개별 국가의 이익과 조화될 수 없다고 본다.

③ (나)는 국제 사회에서 본질적으로 갈등과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④ (나)는 국제 사회의 무정부 상태가 윤리와 이성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본다.

⑤ (가)와 (나) 모두 국제 사회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존재한다고 본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국제 관계를 협력 가능성 중심으로 보는 자유주의적 관점과 무정부 상태에서의 권력·생존 경쟁 중심으로 보는 현실주의적 관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 자유주의적 관점: 국제 제도와 규범을 통해 국가 간 협력이 가능하며 국제 사회의 안정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키워드는 제도·규범·협력·상호 이익이다.
(나) 현실주의적 관점: 국제 사회에는 국가 위의 중앙 정부가 없으므로 각 국가가 생존과 안보를 위해 힘을 추구하며, 권력 분배와 경쟁이 국제 질서를 좌우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키워드는 무정부 상태·국가 생존·권력·경쟁이다.
두 관점의 핵심 차이는 자유주의가 제도를 통한 협력 가능성을 강조하는 반면, 현실주의는 무정부 상태에서 발생하는 권력과 안보 경쟁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군사적 수단을 중요시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이는 힘과 안보를 중시하는 현실주의적 관점에 가깝다. (가)는 분쟁 해결에서 국제 제도, 규범, 협상과 같은 비군사적 협력 수단을 중시한다고 고쳐야 한다.
② X —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이 개별 국가의 이익과 조화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가)는 제도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과 개별 국가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③ O — (나)는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보고 국가가 생존과 안보를 위해 권력을 추구한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 간 이해관계 충돌과 권력 경쟁 때문에 갈등과 전쟁이 본질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본다.
④ X — '무정부 상태가 윤리와 이성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이는 이상주의적·자유주의적 설명에 가깝다. (나)는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가 스스로 생존을 확보해야 하므로 힘과 안보 경쟁이 지속된다고 본다.
⑤ X —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 정부가 존재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두 관점 모두 국제 사회에는 국가 위에서 강제력을 독점하는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정부성을 전제로 하며, 그 상태에서 협력이 가능한지를 다르게 평가한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②는 자유주의에 현실주의의 특징을 붙였고, ④는 현실주의에 이상주의적·자유주의적 특징을 붙였다. 특히 ⑤는 '무정부 상태'를 무질서라는 뜻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선지이다. 국제 관계에서 무정부 상태란 혼란 그 자체가 아니라 국가 위의 중앙 정부가 없다는 뜻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도·규범·협력·공동 이익이 보이면 자유주의로, 무정부 상태·생존·안보·권력 경쟁이 보이면 현실주의로 판단한다. 국제 사회의 무정부성은 두 관점이 공유하는 출발점이고, 그 속에서도 협력이 가능한지를 두고 평가가 갈린다.

암기 포인트

자유주의는 '제도로 협력', 현실주의는 '힘으로 생존'이다. 무정부 상태는 중앙 정부가 없는 상태이다.

NoteBase

5.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우리나라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을 직접 선거로 뽑는다.

① ㉠과 ㉢은 절대다수대표제로 선출된다.
② ㉡의 비례대표 의석은 모두 병립형 방식으로 배분된다.
③ ㉣의 지역구 의원은 광역과 기초 모두 중대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선출된다.
④ ㉤의 선거에서는 정당 공천이 금지되어 있다.
⑤ ㉠~㉤은 모두 임기가 4년이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우리나라 주요 선출직의 선거 방식, 정당 공천 가능 여부, 임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에게 같은 선거 원리가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용어 풀이

상대다수대표제 = 과반수 득표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절대다수대표제 = 원칙적으로 유효투표의 과반수와 같은 절대다수의 지지를 당선 요건으로 삼는 방식이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 지역구 의석과 연계하지 않고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별도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핵심 구분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반수 득표를 요구하는 절대다수제가 아니라 최다 득표자를 뽑는 상대다수 방식이다.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함께 실시하며, 비례대표 의석 전부를 병립형으로 배분하지 않는다.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선거구제가 서로 다르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이 금지된다. 임기는 대통령만 5년이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은 4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절대다수대표제로 선출되지 않는다. 유효투표 가운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상대다수 방식이다.
- 틀린 표현: '절대다수대표제로 선출된다.'
- 올바른 표현: '상대다수 방식으로 선출된다.'

② X
-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은 전부 병립형으로만 배분되지 않는다. 현행 제도에는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당선 의석을 연계해 산정하는 연동배분 의석과 그 밖의 잔여배분 의석이 함께 존재한다.
- 틀린 표현: '모두 병립형 방식으로 배분된다.'
- 올바른 표현: '비례대표 의석은 연동배분 방식과 잔여배분 방식이 결합되어 배분된다.'

③ X
- 지역구 시·도의원은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 방식이고,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은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중선거구 방식이다. 따라서 광역과 기초가 모두 중대선거구제라는 설명은 틀리다.
- 틀린 표현: '광역과 기초 모두 중대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선출된다.'
- 올바른 표현: '광역의회의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 방식으로, 기초의회의 지역구 의원은 중선거구 방식으로 선출된다.'

④ O
- 교육감 선거에서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감 후보자도 특정 정당의 지지·추천을 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없다.

⑤ X
-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의 임기는 각각 4년이다.
- 틀린 표현: '㉠~㉤은 모두 임기가 4년이다.'
- 올바른 표현: '㉠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의 임기는 4년이다.'

오답 포인트

④의 '정당 공천 금지'를 일반적인 선출직의 정당 공천과 혼동하거나, ⑤에서 대통령의 5년 임기를 다른 선출직의 4년 임기와 같다고 보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또한 ③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지역구 선거구제를 모두 중선거구제로 묶어 놓은 표현을 주의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출직별로 당선 방식, 선거구 크기, 정당 공천, 임기를 따로 확인한다. ‘모두’라는 표현이 나오면 대통령의 5년 임기, 교육감의 정당 공천 금지, 광역·기초의회 지역구 선거구제의 차이와 같은 예외를 먼저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대통령 5년, 나머지 4년, 교육감은 정당 공천 금지, 광역 지역구는 소선거구·기초 지역구는 중선거구이다.

NoteBase

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갑은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
> ○ 을은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한 채 해고되었다.

① 갑의 회사는 부당 해고를, 을의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② 갑이 속한 노동조합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을이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거쳐야 한다.
④ 을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
⑤ 갑과 을은 행정소송을 거친 후 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를 구별하고, 각 구제신청의 주체와 불복 절차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갑에 대한 전보의 동기, 을에 대한 해고의 서면 통지 여부, 노동위원회 절차와 민사소송의 관계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부당노동행위 =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부당해고 =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나 법이 정한 절차를 갖추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다.
해고무효확인소송 = 해고가 효력이 없음을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NoteBase

핵심 구분

갑은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보되었으므로 노동조합 가입 상태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 따라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뿐 아니라 노동조합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을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해고는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을에 대한 해고는 효력이 없으며, 을은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조합을 거치지 않고 직접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와 법원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별개의 제도이다. 해고무효확인소송에는 노동위원회의 선행 결정이 필요하지 않다.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는 절차는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행정소송의 순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갑에 대한 조치는 해고가 아니라 전보이며,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을에 대한 해고는 서면 통지가 없어 효력이 없는 부당해고이지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했다는 사실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 틀린 표현: '갑의 회사는 부당 해고를, 을의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 올바른 표현: 갑의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고, 을의 회사는 효력 없는 부당해고를 하였다.

② O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는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갑이 속한 노동조합도 구제신청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X
-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주체는 해고된 근로자이므로 을은 노동조합을 거치지 않고 직접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 틀린 표현: '노동조합을 거쳐야 한다.'
- 올바른 표현: 을은 노동조합을 거치지 않고 직접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④ X
-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와 법원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서로 별개이다. 을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지 않아도 곧바로 법원에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틀린 표현: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
- 올바른 표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데 노동위원회의 선행 결정은 필요하지 않다.

⑤ X
-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 행정소송은 재심보다 뒤에 이루어진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그 재심판정에 불복할 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 틀린 표현: '행정소송을 거친 후 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올바른 표현: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거치고, 그 재심판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①은 갑과 을의 법적 성격을 서로 바꾸어 놓았고, ④는 노동위원회 구제와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나의 연속 절차처럼 보이게 했으며, ⑤는 재심과 행정소송의 순서를 거꾸로 제시했다. 특히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갑의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임을 드러내는 결정적 표현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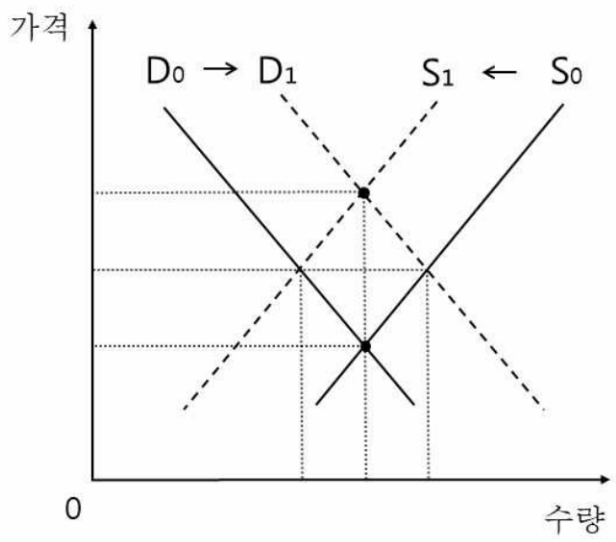
먼저 불이익의 원인이 노동조합 가입·활동인지 확인하여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해고 사례에서는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 여부를 확인한다. 그다음 구제신청 주체를 구분하고, 노동위원회 불복은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행정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이 절차와 별개라는 기준을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노조 이유의 불이익은 부당노동행위, 해고 서면 통지 누락은 해고 무효이다. 불복 순서는 지노위 → 중노위 → 행정소송이며,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

NoteBase

7. 다음은 X재의 수요 곡선(D)과 공급 곡선(S)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D_0 \rightarrow D_1$의 변화 요인으로는 X재의 보완재 가격 하락을 꼽을 수 있다.

② $S_0 \rightarrow S_1$의 변화 요인으로는 X재의 생산 요소 가격 하락을 꼽을 수 있다.

③ $D_0 \rightarrow D_1$, $S_0 \rightarrow S_1$로 인해 X재의 균형 가격은 상승하였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였다.

④ 향후에 X재의 생산 기술이 발전한다면 공급 곡선은 S_1보다 왼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⑤ 향후에 X재의 대체재 가격이 하락한다면 수요 곡선은 D_1보다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이동 방향, 이동 요인, 그리고 두 곡선이 동시에 이동할 때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 변화를 읽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세로축은 가격, 가로축은 수량임을 확인한다.
2. 수요곡선이 D_0에서 D_1으로 오른쪽 이동하고, 공급곡선이 S_0에서 S_1으로 왼쪽 이동했음을 확인한다.
3. 최초 균형점과 두 곡선 이동 후의 새 균형점을 비교한다. 그림에서는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NoteBase

핵심 근거

수요 증가는 가격과 거래량을 모두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공급 감소는 가격을 높이면서 거래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두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면 가격은 반드시 상승하지만 거래량의 변화는 두 이동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이 그림에서는 새 균형점이 최초 균형점의 바로 위에 있으므로 균형거래량은 그대로이고 균형가격만 상승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X재의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면 보완재 소비가 늘고 X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다. 따라서 수요곡선이 D_0에서 D_1으로 오른쪽 이동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② X — '생산 요소 가격 하락'은 생산비를 낮추므로 X재의 공급을 증가시킨다. S_0에서 S_1으로의 왼쪽 이동은 공급 감소이다. 올바르게는 생산 요소 가격 상승이 이러한 공급 감소의 요인이 될 수 있다.
③ X — 그래프에서 새 균형점은 최초 균형점보다 위쪽에 있으면서 수량 좌표는 같다. 따라서 균형가격은 상승하지만 균형거래량은 감소하지 않고 그대로이다. 올바르게는 '균형가격은 상승하였고 균형거래량은 변하지 않았다'이다.
④ X — 생산 기술의 발전은 생산비를 낮추어 공급을 증가시키므로 공급곡선은 S_1보다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⑤ X — X재의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대체재를 더 선택하므로 X재의 수요가 감소한다. 따라서 수요곡선은 D_1보다 왼쪽으로 이동한다.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이동한다.

오답 포인트

③에서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모두 가격을 올리므로 가격 상승은 확정되지만, 거래량에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거래량이 반드시 감소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그림의 새 균형점 수량 좌표를 직접 비교해야 한다. 또한 생산 요소 가격 하락과 기술 발전은 모두 공급 증가 요인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곡선 자체의 이동 방향을 확인한 뒤 이동 요인을 연결한다.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수요·공급 이동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증가·감소·불변이 모두 가능하므로 새 균형점의 가로축 위치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보완재 가격 하락은 수요 증가, 생산 요소 가격 상승은 공급 감소이다.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겹치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불확정이다.

NoteBase

8. 다음 생산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계시장의 경쟁 격화와 소비자 요구의 다양화, 제품 순환 주기의 단축 등에 따라 대량생산 체계가 위기를 맞게 되면서 등장한 유연한 생산 체계이다. 이는 생산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노동의 재숙련화·인간화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① 구상과 실행의 분리를 통해 노동의 세분화를 가속화하는 체계이다.
② 다양한 제품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다품종 소량생산을 추구하는 체계이다.
③ 표준화된 제품 시장이 포화상태에 놓임에 따라 다양한 수요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④ 필요한 제품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만드는 일본의 적시(just-in-time) 생산 체계가 이에 해당한다.
⑤ 경직된 생산조직에서 단순한 노동을 수행하는 기업보다는 노동자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에 더 적합한 체계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유연 생산 체계의 특징을 포드주의적 대량 생산 체계의 특징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유연 생산 체계는 다품종 소량생산, 적시 생산, 다기능 노동을 통해 다양하고 빠르게 변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생산 방식이다. 반면 포드주의적 대량 생산 체계는 표준화된 제품의 대량생산, 구상과 실행의 분리, 세분화된 단순 노동을 특징으로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구상과 실행의 분리'와 '노동의 세분화 가속'은 유연 생산 체계가 아니라 포드주의적 대량 생산 체계 및 테일러주의적 노동 조직의 특징이다. 올바르게는 유연 생산 체계는 구상과 실행의 경직된 분리를 완화하고 노동자가 여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O — 유연 생산 체계는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품종 소량생산을 추구한다.
③ O —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시장이 포화되자, 다양해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 전략으로 유연 생산 체계가 확산되었다.
④ O — 필요한 제품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생산하는 적시 생산은 재고를 줄이고 수요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유연 생산 체계의 대표적 방식이다.
⑤ O — 유연 생산 체계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한 가지 작업만 수행하는 노동자보다 여러 업무와 기능을 맡을 수 있는 다기능 노동자에게 더 적합하다.

오답 포인트

①은 '생산의 유연화'라는 말 때문에 업무를 더 잘게 나누는 방식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구상과 실행의 분리 및 단순 노동의 세분화는 대량 생산 체계의 특징이고, 유연 생산 체계는 다기능화와 직무의 유연성을 중시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다품종 소량생산·적시 생산·다기능 노동·수요 변화 대응은 유연 생산 체계로, 표준화된 대량생산·구상과 실행의 분리·세분화된 단순 노동은 포드주의적 대량 생산 체계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유연 생산은 '다품종·적시·다기능', 대량 생산은 '표준화·세분화·단순 반복'이다.

NoteBase

9. 다음 표는 갑국의 고용통계이다. 2023년 대비 2024년의 고용지표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분	2023년	2024년
비경제활동인구	100명	90명
경제활동인구	100명	100명
취업자 수	90명	90명

① 고용률은 상승하였다.
② 실업률은 하락하였다.
③ 실업자 수는 감소하였다.
④ 생산가능인구는 변하지 않았다.
⑤ 경제활동참가율은 변하지 않았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를 이용해 생산가능인구·실업자 수와 고용률·실업률·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의 합으로 구한다.
2. 실업자 수는 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 수를 빼서 구한다.
3. 고용률·실업률·경제활동참가율의 분모를 구분해 두 연도의 값을 비교한다.

핵심 근거

2023년 생산가능인구는 100명+100명=200명이고, 2024년에는 90명+100명=190명이다. 취업자 수는 두 해 모두 90명이므로 고용률은 2023년 45%에서 2024년 약 47.4%로 상승한다. 실업자 수는 두 해 모두 100명-90명=10명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고용률은 취업자 수생산가능인구× 100이다. 2023년에는 90/200=45%, 2024년에는 90/190≈47.4%이므로 상승하였다.
② X — 실업률이 '하락하였다'는 표현이 틀리다. 실업자 수는 두 해 모두 10명이고 경제활동인구도 두 해 모두 100명이므로 실업률은 모두 10%이다. 올바르게는 '실업률은 변하지 않았다'이다.
③ X — 실업자 수가 '감소하였다'는 표현이 틀리다. 경제활동인구 100명에서 취업자 90명을 빼면 두 해 모두 실업자 수는 10명이다. 올바르게는 '실업자 수는 변하지 않았다'이다.
④ X — 생산가능인구가 '변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틀리다. 생산가능인구는 2023년 200명에서 2024년 190명으로 10명 감소하였다. 올바르게는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였다'이다.
⑤ X — 경제활동참가율이 '변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틀리다. 경제활동참가율은 2023년 100/200=50%에서 2024년 100/190≈52.6%로 상승하였다. 올바르게는 '경제활동참가율은 상승하였다'이다.

오답 포인트

취업자 수와 경제활동인구가 그대로라는 사실만 보고 모든 비율도 같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의 분모인 생산가능인구가 200명에서 190명으로 감소했으므로 두 비율은 상승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수=경제활동인구-취업자 수를 계산한다. 그다음 고용률은 취업자 수/생산가능인구, 실업률은 실업자 수/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로 각각 분모를 구분해 비교한다.

암기 포인트

고용률·참가율의 분모는 생산가능인구, 실업률의 분모는 경제활동인구이다.

NoteBase

10. 다음은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사회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는데 각 직업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와 사회에서의 중요도에 따라 서열화될 수 있다. 더 중요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으로 사회 구성원이 합의하면 개인의 성취동기는 더욱 높아지고 각자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효율성도 높아진다.

< 보 기 >

ㄱ. 사회 불평등을 극복해야 할 과제로 본다.

ㄴ. 개인의 업적에 따른 차등 분배를 중시한다.

ㄷ.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ㄹ. 사회적 희소가치의 분배 기준이 지배 집단에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기능론과 갈등론의 관점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제시문이 직업별 중요도에 따른 차등 보상을 사회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로 보는지가 핵심이다.

핵심 개념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을 중요한 역할에 적합한 인재를 배치하고 성취동기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불가피하고 기능적인 현상으로 본다. 핵심 키워드는 직업의 기능적 중요도, 차등 보상, 적재적소의 인재 배치, 사회 전체의 효율성이다.

갈등론은 사회 불평등을 지배 집단이 희소가치의 분배 기준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정하여 생기는 부당한 현상으로 보고, 이를 극복해야 할 과제로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 ㄴ 가운데 ㄱ이 틀리다. ‘사회 불평등을 극복해야 할 과제’로 보는 것은 갈등론이다. 기능론에 맞는 조합은 ㄴ, ㄷ이다.
② X — ㄱ, ㄷ 가운데 ㄱ이 틀리다.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이 사회의 효율성과 안정에 기여한다고 본다. 따라서 ㄱ을 ㄴ으로 고쳐 ㄴ, ㄷ으로 구성해야 한다.
③ O — ㄴ의 업적에 따른 차등 분배는 개인의 성취동기를 높인다는 기능론의 주장에 해당하고, ㄷ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 역시 기능론의 핵심 주장이다.
④ X — ㄴ은 옳지만 ㄹ이 틀리다. ‘분배 기준이 지배 집단에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주장은 갈등론의 관점이다. ㄹ을 ㄷ으로 고치면 ㄴ, ㄷ이 된다.
⑤ X — ㄷ은 옳지만 ㄹ이 틀리다. 기능론은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를 지배 집단의 일방적 기준이 아니라 직업의 기능적 중요도와 사회적 기여도에 따른 것으로 본다. ㄹ을 ㄴ으로 고치면 ㄴ, ㄷ이 된다.

오답 포인트

‘차등 분배’라는 말만 보고 부정적인 관점으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기능론도 차등 분배 자체를 인정하며, 이를 성취동기와 적재적소의 인재 배치를 위한 장치로 본다. 반대로 ‘극복해야 할 과제’, ‘지배 집단에 유리한 분배 기준’은 갈등론의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불평등이 사회의 효율성·안정·동기 부여·인재 배치에 기여한다고 하면 기능론으로 판단한다. 불평등이 지배와 착취의 결과이며 극복 대상이라고 하면 갈등론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기능론은 차등 보상과 적재적소, 갈등론은 지배 집단과 불평등 극복이다.

NoteBase

11.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특정 국가 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국내법과 달리, 국제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제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나 원칙이 존재한다.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이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① 우리나라 국회는 ㉡의 체결·비준 권한을 갖는다.
② ㉢은 원칙적으로 일부 국가에 한해서만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③ ㉠은 일반적으로 ㉢에 비해 재판 규범으로서 갖는 한계가 크다.
④ ㉡의 예로는 내정 불간섭이, ㉢의 예로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있다.
⑤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은 ㉠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정답 5번

쟁점

이 문제는 국내법·조약·국제 관습법의 적용 범위와 국내적 효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조약의 체결·비준 주체, 국제 관습법의 일반적 구속력, 재판 규범성, 대표 사례를 정확히 연결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조약 = 국가 등 국제법 주체 사이의 명시적 합의로 성립하는 국제법 규범이다.
국제 관습법 = 국가들의 일반적 관행과 그것을 법으로 따라야 한다는 법적 확신이 결합하여 성립하는 국제법 규범이다.

핵심 구분

조약은 원칙적으로 그 조약의 당사국을 구속하지만, 국제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국제사회 일반에 적용된다.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약의 체결·비준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국회는 헌법 제60조 제1항이 정한 중요한 조약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국회는 조약을 직접 체결·비준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중요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조약의 체결·비준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 틀린 표현: '국회는 조약의 체결·비준 권한을 갖는다.'
- 올바른 표현: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국회는 헌법이 정한 중요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② X
- 국제 관습법은 일반적 국가 관행과 법적 확신을 바탕으로 성립하며, 원칙적으로 국제사회 일반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당사국에 한정하여 구속하는 것은 조약의 일반적 특징이다.
- 틀린 표현: '국제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일부 국가에 한해서만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 올바른 표현: '국제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국제사회 일반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③ X
- 국내법은 국내 재판에서 직접 적용되는 기본적인 재판 규범이다. 오히려 국제 관습법은 그 존재와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야 하므로 재판 규범으로 적용할 때 국내법보다 한계가 클 수 있다.
- 틀린 표현: '국내법은 국제 관습법보다 재판 규범으로서 갖는 한계가 크다.'
- 올바른 표현: '국제 관습법은 국내법보다 재판 규범으로 적용할 때 한계가 클 수 있다.'

④ X
-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조약 준수 원칙은 국제 관습법의 대표 사례이고, 파리협정은 국가들이 합의하여 체결한 다자조약이다. 선지에서 두 사례를 서로 바꾸어 제시하였다.
- 틀린 표현: '조약의 예는 조약 준수 원칙이고, 국제 관습법의 예는 파리협정이다.'
- 올바른 표현: '국제 관습법의 예는 조약 준수 원칙이고, 조약의 예는 파리협정이다.'

⑤ O
-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선지의 설명이 옳다.

오답 포인트

①에서 국회의 '동의권'을 대통령의 '체결·비준권'으로 바꾼 표현과 ④에서 조약 준수 원칙과 파리협정의 유형을 서로 뒤바꾼 표현이 핵심 함정이다. 또한 조약은 당사국 중심, 국제 관습법은 국제사회 일반이라는 적용 범위의 차이를 혼동하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국제법 규범이 국가 간 명시적 합의인 조약인지, 일반적 관행과 법적 확신으로 성립하는 국제 관습법인지 구분한다. 그다음 조약의 체결·비준 주체는 대통령, 중요한 조약에 대한 동의 주체는 국회라는 권한 배분을 확인하고, 국내적 효력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조약은 당사국의 합의, 국제 관습법은 일반 관행과 법적 확신, 국내 효력은 헌법 제6조이다.

NoteBase

12. (가)~(다)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이다. 각각에 속하는 구체적 권리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주권자로서 국민이 국가기관의 형성과 국가의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
> (나)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특정한 요구를 하거나 침해당한 기본권의 구제를 요구할 권리
>
> (다) 국민으로서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거나 요구할 권리

	(가)	(나)	(다)
①	선거권	공무담임권	청원권
②	선거권	공무담임권	사회보장권
③	공무담임권	청원권	국가배상청구권
④	공무담임권	청원권	사회보장권
⑤	국민투표권	노동 3권	청원권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기본권의 성격을 나타내는 설명을 참정권·청구권·사회권으로 구분하고, 각 기본권에 속하는 구체적 권리를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는 국민이 국가기관의 형성과 정치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참정권이다. 선거권·공무담임권·국민투표권 등이 이에 속한다.
(나)는 국민이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요구하는 청구권이다.
청원권·재판청구권·국가배상청구권 등이 이에 속한다.
(다)는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하는 사회권이다. 사회보장권·교육을 받을 권리·근로의 권리·노동 3권 등이 이에 속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가)의 선거권은 참정권에 속하지만, (나)의 '공무담임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참정권에 속하고 (다)의 '청원권'은 사회권이 아니라 청구권에 속한다. 올바르게는 (나)에 청구권의 구체적 권리, (다)에 사회보장권과 같은 사회권의 구체적 권리를 연결해야 한다.
② X - (가)의 선거권과 (다)의 사회보장권은 각각 참정권과 사회권에 속하지만, (나)의 '공무담임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참정권에 속한다. 올바르게는 (나)에 청원권·재판청구권·국가배상청구권 등을 연결해야 한다.
③ X - (가)의 공무담임권과 (나)의 청원권은 각각 참정권과 청구권에 속하지만, (다)의 '국가배상청구권'은 사회권이 아니라 청구권에 속한다. 올바르게는 (다)에 사회보장권 등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하는 권리를 연결해야 한다.
④ O - 공무담임권은 참정권, 청원권은 청구권, 사회보장권은 사회권에 각각 속하므로 (가)~(다)를 모두 바르게 연결하였다.
⑤ X - (가)의 국민투표권은 참정권에 속하지만, (나)의 '노동 3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사회권에 속하고 (다)의 '청원권'은 사회권이 아니라 청구권에 속한다. 올바르게는 (나)에 청원권과 같은 청구권을, (다)에 노동 3권이나 사회보장권과 같은 사회권을 연결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공무담임권은 명칭에 '공무'가 들어가지만 국가에 무엇을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공직을 맡아 정치에 참여하는 참정권이다. 또한 청원권과 국가배상청구권은 국가에 요구하는 청구권이고, 노동 3권과 사회보장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사회권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치 참여'이면 참정권, '국가에 요구하거나 권리 침해의 구제를 요청'하면 청구권, '인간다운 생활의 실질적 보장'이면 사회권으로 판단한다. 그다음 각 선지의 세 연결이 모두 맞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참정권은 정치 참여, 청구권은 국가에 요구,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다.

NoteBase

13. 다음은 연구자 갑과 을이 각각 수행한 연구 사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연구자 갑은 초·중·고등학교의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교사 1,000명을 무작위로 표집하였다. 갑은 이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그 결과를 통계 처리하였다.
>
> ○ 연구자 을은 이주배경 학생이 많은 학교의 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높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사 15명을 선정하였다. 을은 이들과 각각 2~3차례씩 만나 장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교사들이 언급한 어려움의 의미를 해석하였다.

① 갑의 연구는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초하고 있다.

② 을의 연구는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용이하다.

③ 갑의 연구는 을의 연구에 비해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 개입 가능성이 높다.

④ 을의 연구는 갑의 연구에 비해 인간 행위의 동기를 이해하는 데 유리하다.

⑤ 갑과 을의 연구는 모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법칙 발견에 목적이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갑의 양적 연구와 을의 질적 연구를 비교하여 방법론적 전제, 일반화 가능성, 가치 개입 가능성, 연구 목적의 차이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양적 연구는 구조화된 자료를 수치화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변수 간 관계와 일반적 법칙을 밝히려는 연구이다. 방법론적 일원론, 객관성, 일반화, 법칙 발견이 핵심 키워드이다.
질적 연구는 면접·참여 관찰 등을 통해 행위자가 부여하는 의미와 동기를 깊이 이해하려는 연구이다. 방법론적 이원론, 해석적 이해,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 개입 가능성이 핵심 키워드이다.
갑은 무작위 표집, 구조화된 질문지, 통계 처리라는 점에서 양적 연구이고, 을은 소수의 연구 대상을 선정하여 심층 면접을 하고 의미를 해석했다는 점에서 질적 연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갑의 연구는 양적 연구이므로 방법론적 이원론이 아니라 자연 과학과 사회 과학의 연구 방법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는 방법론적 일원론에 기초한다. 틀린 표현은 '방법론적 이원론'이며, 올바르게는 '방법론적 일원론'이다.

② X — 을의 질적 연구는 소수의 대상을 깊이 연구하므로 연구 결과를 전체 집단에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틀린 표현은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용이하다'이며, 올바르게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지만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리하다'이다.

③ X — 구조화된 도구와 통계 분석을 사용하는 갑의 양적 연구는 연구자의 가치 개입을 줄이려 한다. 연구자와 연구 대상의 상호 작용 및 해석을 중시하는 을의 질적 연구에서 주관적 가치가 개입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틀린 표현은 '갑의 연구는 을의 연구에 비해 … 가능성이 높다'이며, 올바르게는 '을의 연구는 갑의 연구에 비해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이다.

④ O — 을은 교사들과 장시간 심층 면접을 하여 그들이 언급한 어려움의 의미를 해석하였다. 이는 행위자의 관점에서 인간 행위의 동기와 의미를 이해하는 데 유리한 질적 연구의 특징이다.

⑤ X —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 관계에서 일반적 법칙을 발견하려는 것은 갑의 양적 연구에 해당한다. 을의 질적 연구는 그러한 법칙 발견보다 행위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틀린 표현은 '갑과 을의 연구는 모두'이며, 올바르게는 '갑의 연구는 변수 간 법칙 발견을, 을의 연구는 행위 의미의 심층적 이해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무작위 표집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갑을 질적 연구로 보거나, 심층 면접이 자세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을의 결과를 쉽게 일반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특히 ③은 가치 개입 가능성의 비교 방향을, ⑤는 양적 연구의 목적을 두 연구 모두의 목적으로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구조화된 질문지·무작위 표집·통계 처리·변수 간 관계'가 보이면 양적 연구로, '소수 대상·심층 면접·의미 해석·행위 동기 이해'가 보이면 질적 연구로 판단한다. 그다음 양적 연구는 일원론·객관성·일반화·법칙 발견, 질적 연구는 이원론·해석적 이해·가치 개입 가능성과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양적 연구는 수치로 법칙을 설명하고, 질적 연구는 대화와 관찰로 의미와 동기를 이해한다.

NoteBase

14. 외환시장의 변화 요인과 원/달러 환율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 물가가 상승하면 환율이 상승한다.
② 외국 경기가 좋아지면 환율이 상승한다.
③ 국내 이자율이 상승하면 환율이 하락한다.
④ 외국 이자율이 상승하면 환율이 상승한다.
⑤ 국내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면 환율이 하락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원/달러 환율을 외화의 수요와 공급으로 판단하고, 물가·경기·이자율·가격 경쟁력의 변화가 환율을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원/달러 환율은 1달러를 사는 데 필요한 원화의 양이다. 환율 상승은 원화 가치 하락을, 환율 하락은 원화 가치 상승을 뜻한다.
외화 수요가 늘거나 외화 공급이 줄면 환율이 상승하고, 외화 수요가 줄거나 외화 공급이 늘면 환율이 하락한다.
수출 증가는 외화 공급을 늘리고, 수입 증가와 해외 투자 증가는 외화 수요를 늘린다.

선지별 해설

① O — 국내 물가가 상승하면 국내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한다. 외화 공급은 줄고 외화 수요는 늘므로 환율이 상승한다.
② X — 외국 경기가 좋아지면 외국의 소득과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한다. 수출로 들어오는 외화 공급이 늘므로 환율은 하락한다. 틀린 표현은 '환율이 상승한다'이며, 올바르게는 '환율이 하락한다'이다.
③ O — 국내 이자율이 상승하면 국내 금융 자산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외국 자본이 유입된다. 외화 공급이 늘므로 환율이 하락한다.
④ O — 외국 이자율이 상승하면 외국 금융 자산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해외 투자와 자본 유출이 늘어난다. 외화 수요가 늘므로 환율이 상승한다.
⑤ O — 국내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면 수출이 증가하여 외화 공급이 늘어난다. 따라서 환율이 하락한다.

오답 포인트

②에서 '외국 경기가 좋아진다'를 외국 통화의 가치 상승으로 바로 연결하면 틀린다. 이 문항에서는 외국 경기 호전이 외국의 수입 수요를 늘려 우리나라 수출과 외화 공급을 증가시키는 경로를 판단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요인이 수출·수입 또는 국제 자본 이동 중 무엇을 바꾸는지 먼저 찾는다. 그다음 외화 수요 증가·외화 공급 감소는 환율 상승, 외화 수요 감소·외화 공급 증가는 환율 하락으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외화 수요 증가·공급 감소는 환율 상승, 외화 수요 감소·공급 증가는 환율 하락이다.

NoteBase

15.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시장 실패의 요인 중 하나인 외부 효과는 A와 B로 나뉜다. A는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고도 대가를 받지 않는 상태를, B는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주고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

① A의 경우 생산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보다 개인적 비용이 적다.
② A에서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소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③ B의 경우 소비 측면에서 사회적 편익보다 개인적 편익이 작다.
④ B로 인한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는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있다.
⑤ A의 예로는 오염 물질 배출을, B의 예로는 독감 예방 접종을 들 수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긍정적 외부 효과와 부정적 외부 효과가 사적 비용·편익과 사회적 비용·편익에 어떤 차이를 만들고, 시장 거래량을 사회적 최적 수준에서 어느 방향으로 벗어나게 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A는 긍정적 외부 효과로, 경제 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지만 그 대가를 받지 않는 상태이다. 시장에서는 그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소비된다.
B는 부정적 외부 효과로, 경제 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주지만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태이다. 시장에서는 그 손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소비된다.
A는 외부 편익, B는 외부 비용이 핵심 구별 기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사회적 비용보다 개인적 비용이 적다'이다. A가 생산 측면의 긍정적 외부 효과라면 외부 편익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개인적 비용보다 작다. 올바르게는 '개인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이다.

② O
긍정적 외부 효과의 편익이 시장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므로 시장의 생산·소비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어진다.

③ X
틀린 표현은 '사회적 편익보다 개인적 편익이 작다'이다. B가 소비 측면의 부정적 외부 효과라면 제3자에게 주는 손해 때문에 사회적 편익이 개인적 편익보다 작다. 올바르게는 '개인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크다'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다. 보조금은 긍정적 외부 효과를 늘리는 대표적 수단이다. 부정적 외부 효과에는 세금 부과, 규제 등으로 외부 비용을 행위자의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방안이 사용된다.

⑤ X
A와 B의 사례를 서로 바꾸어 제시하였다. 오염 물질 배출은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B의 사례이고, 독감 예방 접종은 감염 확산을 줄여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A의 사례이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③은 '개인적'과 '사회적'의 대소 관계를 뒤집었고, ④와 ⑤는 긍정적 외부 효과와 부정적 외부 효과의 정책·사례를 서로 바꾸었다. 외부 편익은 시장 거래량을 과소하게 하고 외부 비용은 시장 거래량을 과다하게 한다는 방향을 먼저 잡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3자에게 이익을 주면 긍정적 외부 효과, 손해를 주면 부정적 외부 효과로 구분한다. 그다음 긍정적 외부 효과는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고 보조금 등으로 촉진하며, 부정적 외부 효과는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고 세금·규제 등으로 억제한다는 기준을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외부 편익은 과소 거래·촉진, 외부 비용은 과다 거래·억제이다.

NoteBase

16. (가)와 (나)의 사회변동 과정과 관련된 개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전통적인 농촌 사회에서 사람들은 마을을 이루며 살았다. 사람들은 서로 협동하여 농사를 지었고, 곡식을 수확하면 서로 어울려 축제를 열고 기쁨을 나누었다. 다양한 농기구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면서 수확도 점점 늘어났다.
>
> (나) 농업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농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생활용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분업이 발달해갔고, 다양한 제품을 교환하기 위해 시장이 열리고 거래가 점점 확장되어 갔다. 시장이 확대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도시가 형성되었고, 시장 경쟁이 생겨나면서 자신들의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동업자들이 조직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가)	(나)
①	2차 집단	원초 집단
②	외집단	내집단
③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④	산업형 사회	군사형 사회
⑤	공동체	결사체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전통적 농촌 사회에서 생산력 증대와 분업·시장·도시의 발달로 사회가 변하는 과정에 공동체와 결사체의 개념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동체는 혈연·지연과 친밀한 유대에 기초하여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집단이다. 결사체는 구성원이 특정한 목적이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집단이다.

(가)는 마을 공동생활과 협동 노동이 중심이므로 공동체이고, (나)는 분업·시장 경쟁 속에서 동업자들이 수익 보장이라는 목적을 위해 조직을 만들므로 결사체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가)의 '2차 집단'이 틀렸다. 마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대면하고 친밀하게 협동하는 집단은 2차 집단보다 1차 집단의 성격이 강하다. (나)의 시장 거래 및 이익 추구 조직도 자연 발생적인 원초 집단이 아니라 목적 지향적인 2차 집단·결사체에 가깝다.
② X — (가)의 '외집단'이 틀렸다. 함께 생활하고 협동하며 소속감을 나누는 마을은 구성원에게 내집단이 된다. (나)의 '내집단'은 개인의 소속 의식을 기준으로 하는 말이므로, 분업과 시장 확대라는 사회 변동 자체를 설명하는 개념으로는 적절하지 않고 목적에 따라 형성된 결사체가 알맞다.
③ X — (가)의 '공식 조직'이 틀렸다. 전통적 마을은 공식적 규칙과 체계에 따라 인위적으로 만든 조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동체이다. 반대로 (나)의 동업자 조직은 공동 이익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으므로 비공식 조직보다 공식 조직·결사체에 가깝다.
④ X — (가)의 '산업형 사회'와 (나)의 '군사형 사회'가 서로 바뀌었다. (가)는 농업 중심의 전통 사회이고, (나)는 분업·시장·경쟁이 확대된 산업형 사회이다. 군사형 사회는 강제와 위계, 집단적 통제를 중심으로 하므로 (나)의 모습과 맞지 않는다.
⑤ O — (가)는 친밀한 유대와 공동생활에 기초한 공동체이고, (나)는 시장 경쟁 속에서 동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결사체이다.

오답 포인트

(가)와 (나)에 여러 집단의 특징이 함께 나타나 보이지만, 변화의 핵심은 '친밀한 생활 공동체'에서 '목적과 이익을 위한 조직'으로의 이동이다. 특히 (나)에 조직이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공식 조직이나 내집단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혈연·지연, 친밀성, 공동생활, 자연 발생이 강조되면 공동체로 판단한다. 특정 목적, 계약, 이해관계, 이익 추구, 의도적 조직이 강조되면 결사체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공동체는 정과 생활의 결합, 결사체는 목적과 이익의 결합이다.

NoteBase

17.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관료제와 탈관료제 중 하나임)

> 19세기 영국에서 철도 회사를 비롯한 대규모 산업 조직들이 급성장하면서, 명확한 규칙과 위계, 분업 체계를 특징으로 하는 A가 등장하였다. 그러나 정보화와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시장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최근 IT 기업들은 수평적 체계와 유연한 구조를 통해 창의성을 높이는 B를 채택하고 있다.

① A는 단순 업무의 반복으로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제해 인간 소외를 낳는다.

② B에서는 규정을 따르는 것이 목표보다 앞서 목적 전치가 일어날 수 있다.

③ A와 달리 B에서는 안정성을 중시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④ B와 달리 A에서는 신분 보장이 약화되어 무사안일주의가 줄어든다.

⑤ A와 B 모두 연공서열보다 구성원의 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을 중시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특징 및 역기능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A 관료제: 명확한 규칙, 위계질서, 전문화된 분업을 바탕으로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조직 형태이다. 키워드는 위계, 규칙, 분업, 안정성이다.

B 탈관료제: 수평적 의사소통과 유연한 조직 구조를 통해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창의성을 높이는 조직 형태이다. 키워드는 수평성, 유연성, 자율성, 성과와 능력이다.

관료제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강하고, 탈관료제는 변화 대응과 창의성에 강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관료제에서는 세분화된 단순 업무를 반복하면서 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억제되고 인간 소외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A에 대한 설명으로 옳다.
② X — 틀린 표현은 'B에서는 규정을 따르는 것이 목표보다 앞서 목적 전치가 일어날 수 있다'이다. 규칙 준수 자체가 목적이 되는 목적 전치는 경직된 규칙을 중시하는 A 관료제의 대표적 역기능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B에서는 안정성을 중시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이다. 안정성을 중시해 변화에 경직되기 쉬운 것은 A 관료제이며, B 탈관료제는 유연한 구조로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A에서는 신분 보장이 약화되어 무사안일주의가 줄어든다'이다. A 관료제는 일반적으로 신분 보장과 연공서열의 성격이 강하여 무사안일주의가 나타날 수 있고, B 탈관료제에서는 신분 보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⑤ X — 틀린 표현은 'A와 B 모두 연공서열보다 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을 중시한다'이다. 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을 더 중시하는 것은 B 탈관료제이며, A 관료제는 상대적으로 연공서열과 직급 중심의 보상 성격이 강하다.

오답 포인트

②와 ③은 관료제의 역기능을 B의 특징처럼 바꾸어 놓았고, ④와 ⑤는 A와 B의 신분 보장 및 보상 원리를 뒤바꾸었다. 특히 '목적 전치'는 규칙 준수가 본래 목표를 밀어내는 관료제의 대표적 역기능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위계·규칙·분업·안정성이 보이면 관료제, 수평성·유연성·자율성·성과 중심이 보이면 탈관료제로 판단한다. 목적 전치, 인간 소외, 무사안일주의와 같은 역기능은 관료제 쪽에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관료제는 '위계·규칙·안정', 탈관료제는 '수평·유연·창의'이다.

NoteBase

18.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은 농촌에서 창업을 준비하던 중, 지방자치단체가 대도시 청년에게만 창업 지원금 1억 원을 지급하고 농촌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갑은 거주지 인구 규모만으로 지원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A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①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기본권이다.
② 법률에 의해서도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다.
③ 기본권 가운데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④ 국가에게 일정한 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⑤ 국민이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능동적 기본권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사례에서 침해된 기본권이 평등권임을 파악하고, 평등권과 자유권·사회권·청구권·참정권의 특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A는 평등권이다. 평등권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이며, 다른 기본권을 동등하게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
자유권은 국가 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이고,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현대적 기본권이다. 청구권은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가에 구제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참정권은 국민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권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평등권은 모든 국민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고 다른 기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기본권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법률에 의해서도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다. 평등권은 모든 차이를 금지하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며,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적 취급은 허용될 수 있다. 올바르게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기본권'이다. 이는 사회권의 특징이다. 올바르게는 평등권이 자유권과 함께 근대 시민 혁명 과정에서 확립된 기본권이라고 해야 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국가에게 일정한 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이는 청구권의 특징이다. 올바르게는 평등권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라고 해야 한다.
⑤ X — 틀린 표현은 '정치 과정에 참여하여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능동적 기본권'이다. 이는 참정권의 특징이다. 올바르게는 평등권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라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사례의 '거주지 인구 규모만으로 지원 여부를 달리한다'는 부분에서 평등권을 찾아야 한다. ②의 '절대적', ③의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④의 '국가에 작위를 요구', ⑤의 '정치 과정에 참여'는 각각 다른 기본권의 특징을 섞어 놓은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평등권, 국가 간섭의 배제는 자유권,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사회권, 국가에 구제를 요구하는 것은 청구권, 정치 참여는 참정권으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평등권은 차별 금지, 자유권은 간섭 배제,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 청구권은 권리 구제, 참정권은 정치 참여이다.

NoteBase

19. 다음은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의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가)~(다)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공공 부조, 사회 보험, 사회 서비스 중 하나임)

유형	사례
(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 부상 및 장해, 사망 등에 대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보내 지원하는 제도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제도

① (가)는 선별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② (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③ (다)는 상호 부조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④ (가)와 (나)는 임의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⑤ (다)는 (가)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최저 생활 보장 사례를 각각 사회 보험·사회 서비스·공공 부조로 분류하고, 가입 방식과 재원 부담 및 소득 재분배 효과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 사회 보험: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자·사용자 등이 보험료를 분담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강제 가입, 사전 대비, 상호 부조가 핵심이다.
(나) 사회 서비스: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상담·돌봄·재활 등 비금전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의 방문 지원이 이에 해당한다.
(다) 공공 부조: 생활 유지 능력이 부족한 국민을 선별하여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조세를 재원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국가 책임, 선별적 지원, 큰 소득 재분배 효과가 핵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가)는 사회 보험이므로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하다. 틀린 표현은 '선별적 복지 이념'이며, 올바르게는 '보편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이다.
② X — (나)는 필요한 돌봄을 직접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이다. 틀린 표현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이며, 이는 보험료를 미리 분담하여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 보험인 (가)의 대표적 성격이다. 올바르게는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봄 등 비금전적 서비스를 제공한다'이다.
③ X — (다)는 공공 부조이므로 상호 부조가 아니라 국가 책임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틀린 표현은 '상호 부조의 원리'이며, 올바르게는 '국가 책임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이다.
④ X — (가)는 사회 보험이므로 법률에 따른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나)는 보험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운영되는 제도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가)와 (나)는 임의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이며, 올바르게는 '(가)는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나)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지원한다'이다.
⑤ O — (다) 공공 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저소득층을 선별하여 급여를 제공하므로, 보험료 납부와 급여가 연계되는 (가) 사회 보험보다 일반적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오답 포인트

산업 재해 보상 급여가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는 이유로 (가)를 선별적 복지로 판단하거나, 국가가 제공하는 제도라는 이유만으로 (다)에 상호 부조를 연결하기 쉽다. 제도의 수혜 대상보다 보험료 납부 여부, 가입 방식, 급여 형태와 재원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험료를 분담하고 사회적 위험에 미리 대비하면 사회 보험, 돌봄·상담·재활 같은 비금전적 지원이면 사회 서비스, 조세로 생활 곤란자를 선별 지원하면 공공 부조로 판단한다. 소득 재분배 효과는 일반적으로 공공 부조가 사회 보험보다 크다.

암기 포인트

사회 보험은 보험료·강제 가입·상호 부조, 사회 서비스는 돌봄 등 비금전적 지원, 공공 부조는 조세·선별 지원·국가 책임이다.

NoteBase

20. 밑줄 친 '수요의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수요의 탄력성은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 소비자의 소득 변화, 연관재의 가격 변화 등에 따라 얼마나 민감하게 변화하는지로 측정할 수 있다.

< 보 기 >

ㄱ. 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

ㄴ.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은 재화는 열등재에 해당한다.

ㄷ. 대체 관계에 있는 두 재화의 교차탄력성은 양(+)의 값을 갖는다.

ㄹ. 수요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인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판매 수입이 감소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수요의 가격탄력성·소득탄력성·교차탄력성의 의미와 가격 변화가 판매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민감도이다. 대체재가 많을수록 다른 재화로 옮겨 가기 쉬워 가격탄력성이 커진다.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소득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민감도이다. 소득탄력성이 음수이면 열등재이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정상재 중 필수재에 해당한다.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한 재화의 가격 변화에 대한 다른 재화 수요량의 민감도이다. 대체재는 양의 값, 보완재는 음의 값을 가진다.

수요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면 가격 상승률보다 수요량 감소율이 작으므로 가격이 오를 때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옳지만 ㄴ은 옳지 않다.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다는 조건만으로 열등재라고 할 수 없다. 올바르게는 소득탄력성이 음수인 재화가 열등재이다.
② O — ㄱ과 ㄷ이 모두 옳다. 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커지고, 대체 관계인 두 재화의 교차탄력성은 양의 값을 가진다.
③ X — ㄷ은 옳지만 ㄴ은 옳지 않다. 틀린 표현은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은 재화는 열등재'이다. 올바르게는 소득탄력성이 음수이면 열등재이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정상재 중 필수재이다.
④ X — ㄴ과 ㄹ이 모두 옳지 않다. ㄴ은 '소득탄력성이 음수인 재화는 열등재'로 고쳐야 하고, ㄹ은 '비탄력적 수요에서는 가격이 오르면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로 고쳐야 한다.
⑤ X — ㄷ은 옳지만 ㄹ은 옳지 않다. 비탄력적 수요에서는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량 감소 비율이 더 작으므로 판매 수입은 감소하지 않고 증가한다.

오답 포인트

ㄴ의 '1보다 작다'를 곧바로 열등재의 조건으로 보는 것과, ㄹ에서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량 감소만 보고 판매 수입도 감소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함정이다. 열등재의 기준은 소득탄력성이 음수라는 점이며, 비탄력적 수요에서는 가격과 판매 수입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탄력성의 부호와 크기를 구분한다. 소득탄력성은 음수이면 열등재,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필수재이며, 교차탄력성은 대체재이면 양수이다. 판매 수입은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가격과 같은 방향, 탄력적일 때 가격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암기 포인트

대체재가 많으면 가격탄력성은 커지고, 대체재의 교차탄력성은 양수이다. 열등재는 소득탄력성이 음수이며, 비탄력적 수요에서는 가격과 판매 수입이 같은 방향이다.

NoteBase